

김광수 “‘여야 개헌협상회의’ 즉각 추진”

‘야3당 개헌연대’ 공동 입장문 발표... 단일안·개헌성사 촉구대회·TV 끝장토론 실시 등 4가지

민주평화당(김광수)·정의당(심상정)·바른미래당(김관영) 등 야3당의 헌정특위 위원장 및 간사들은 지난주 공동입장 발표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방문에 이어 16일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의 성사를 위한 ‘야3당 개헌연대’ 공동행동에 합의하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민주평화당 헌정특위 간사인 김광수의

원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첨예한 대립에 개헌 논의가 진척을 보지 못한 채 동력을 상실해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헌의 성사를 위해 원내대표와 헌정특위 간사가 참여하는 ‘여야 개헌협상회의’를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와대와 집권여당에 대해 “개헌은 국민과의 약속임을 강조하며 촛불혁명의

만들어 낸 개헌의 기회, 개혁의 기회를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사람에게도 때가 있듯이 개헌도, 개혁도 때가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야3당 헌정특위 대표들은 개헌논의 돌파구를 만들기 위해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의 주요쟁점에 대한 단일안 마련, 18

일 개헌성사 촉구대회 개최, 여야 개헌협상회의 즉각 추진, 주요쟁점에 대한 TV 끝장토론 실시’ 등 4가지 사항에 대한 야3당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또한, 3당 헌정특위 대표들은 빠른 시일 내 만나 개헌 주요쟁점 공동안 마련을 위한 세부적인 논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김진성 기자

이병기 “최경환에 고마워서 1억 줬다”

이병기(71) 전 국가정보원장이 최경환(63) 자유한국당 의원은 돈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16일 법정에서 밝혔다.

이 전 원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 최 의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1차 공판에 증인 출석했다.

그는 검찰이 “2014년 10월 경제부총리였던 최경환 의원에게 1억원을 갖다주라고 이현수 당시 기초실장에게 지시했느냐”고 검찰이 묻자 “그렇다”고 인정했다.

이는 “1억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는 최 의원의 입장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다만 이 전 원장은 최 의원의 요구로 돈을 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전 원장은 “내가 원장 부임 첫 몇달 사건 등으로 국정원 예산 줄인다고 난리가 났었다”며 “9월 초에 수정예산안이라고 들은 걸로 기억하는데, 이 실장이 기재부 쪽에 전화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최 의원에게 예산 잘 좀 도와달라, 협조해줬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가볍게 전화 한 번 했다”며 “이후 국정원 예산관으로부터 예산이 (국정원 제출안대로) 통과될 것 같다, 관참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떠올렸다.

이 전 원장은 “그래서 고마운 마음에 격려를 하던 어떤가 생각했던 것이다. 내가 최 의원에게 뇌물을 줄 군번도 아니다”라며 “제가 잘못 판단했고 이 실장과 상의 끝에 나온 게 1억원이었다”고 밝혔다.

이 전 원장은 “그래서 최 의원에게 인간적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뉴시스

“공론화 거쳐 대입제도 개편”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는 공론화 위원회를 거쳐 대입제도 개편안을 오는 8월 최종 권고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교육부가 발표한 정시모집 확대 계획을 두고 논란이 뜨거워지자 2022학년도 대입 개편 최종안 확정 전에 앞서 국민 여론을 묻겠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찬반 여론이 거세지자 공론화위를 운영, 중단 반대 결정에 따라 공사를 끝까지 진행하기로 한 것과 유사하다.

당시 공론화위가 갈등의 성숙한 해결이란 의미를 남겼지만 사회적 에너지 소모, 공약 수정 명분 등의 비판도 따랐던만큼 이번에도 적잖은 과장이 예상된다.

국가교육회의는 “이번 방안에 따라 국민참여형 공론화 과정을 추진하며 그 결과를 반영해 오는 8월 초까지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가 운영된다. 위원회는 국가교육회의 위원, 대학·전문대학 및 시·도교육청 협의체가 추천한 교육 전문가 등 13인 내외로 구성된다.

공론화위는 권역별 국민토론회, TV 토론회, 온라인 플랫폼 운영 등으로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겠다는 방침이다. 도출된 방안은 국가교육회의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대입제도 개편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과 갈등이 존재하는 상황이므로 공론화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충실하게 수렴하고 국민참여를 확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대입제도 개편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기억과 다짐의 거리 외침막’ 찾아 세월호 참사 4주기인 16일 송하진 도지사가 전주 풍남문 광장에 마련된 ‘기억과 다짐의 거리 외침막’을 찾아 분향하며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정동영 “세월호 4주기, 진상규명 이제 시작”

사회적 참사 특조위 활동에 높은 기대감... “세월호를 잊지 않고 함께하는 것이 큰 힘”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세월호 4주기인 오늘 “세월호 진상규명은 이제 시작”이라며 “지난 4년과 앞으로의 4년은 달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세월호 4주기입니다. 하지만 진상규명은 이제 시작입니다”라며 작년 11월 24일 사회적 참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후 구성된 사회적 참사 특조위(기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 활동에 높은 기대감을 드러냈다.

정 의원은 “진상규명이 마무리될 때까지 유가족들이 ‘세상에 우리 편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헤쳐가는 게 핵심”이라며 “세월호를 잊지 않고 함께하는 것이 큰 힘”이라고 밝혔다.

정동영 의원은 작년 11월 사회적 참사법이 통과된 직후 “사회적 참사법 통과를 위해 땀과 눈물로 애쓰신 많은 분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다”며 “여러분이 흘린 땀과 눈물 헹겨지지 않도록 특별조사위원회가 신속하게 구성되어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진성 기자

軍·반대단체 성주 사드기치 통행여부 재논의 ‘결렬’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기지 시설개선 공사자재 추가 반입을 놓고 16일 국방부와 반대단체가 재논의를 했지만 결국 결렬됐다.

국방부와 반대단체 관계자 5명은 이날 오전 10시경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인근에서 공사자재 추가 반입을 두고 대화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제대로 된 논의를 시작도 하기 전에 양측이 헤어져 협상 진행은 난항을 겪고 있다.

반대단체 측은 지난해 11월 사드기지에 반입된 민간 임대 장비의 반출만을 허용했지만 군 당국이 12일 미군 장비만 가지고 나오면서 거짓말을 했다는 입장이다.

반대단체 관계자는 “사드기지에서 민간 장비가 아닌 주한 미군 장비만 트레일러 12대로 빼낸 것은 약속 위반”이라며 “진정성 있는 사과가 선행되면 협상에 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민간 장비만 반출한다는 약속은 하지 않았다는 계군 당국의 설명이다.

사드기지 내 장비는 주한미군 중장비와 지난해 11월 민간에서 임대한 장비 등으로 나뉜다.

군 당국은 당초 노후장비를 구분 없이 외부로 반출할 계획이었지만 미군과 임대업체 간에 장비 반출·재진입이 자유롭지 않은 상황을 놓고 고민하다 결국 민간 임대 장비의 반출은 보류했다.

/뉴시스



사람과도시를 품격서전주

가장 한국적인 세계도시 전주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우뚝 서겠습니다

